

그린뉴딜, 충남형 농촌융복합산업 분야 정책 모델 제안

정현희

충남연구원 농업6차산업센터

h2jung@cni.re.kr

본 연구의 목적은 2020년 ‘한국판 그린뉴딜’이 발표되었고 당분간 국정 전반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 분명함에 따라, 충남 또한 이와 더불어 농촌융복합산업 분야 실천 가능한 정책 모델로 제안하기 위함임.

CONTENTS

1. 연구배경 및 방법
2. 한국판 그린뉴딜의 개념과 의의
3. 충남형 그린뉴딜
농촌융복합산업 분야
4. 요약 및 제언

요 약

- 2020년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 연설에서 2050년까지 지역이 주체가 되는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고 밝히면서 지역이 주체가 되어 기후위기·경제위기·불평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 주도의 ‘한국판 그린뉴딜’ 계획을 발표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2025년까지 국비 114.1조원을 투입, 안정망 강화라는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digital new deal)과 그린뉴딜(green new deal)의 두 축으로 추진되는 것이 핵심
- 그린뉴딜과 직접적 연관성을 갖는 중점과제는 탈탄소·생태(유기)농업·경축순환형 농업 전환 및 산림 탄소저감기능 강화 그리고 농어촌자원 이용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지역에너지 자립이라는 두 개축으로 구성
- 농촌융복합산업 측면에서 충남형 그린뉴딜을 3대 분야 10개 과제로 제안
 - 1) 충남형 그린뉴딜 농촌융복합산업 정책분야
 - 2) 충남형 그린뉴딜 농촌융복합산업 오프라인 도·소매 유통분야
 - 3) 충남형 그린뉴딜 농촌융복합산업 온라인 판로 분야

01 연구배경 및 방법

1. 연구배경

- 기후변화(Climate Change)로 인해 발생하는 가뭄, 홍수,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의 배출 증가는 코로나(Covid-19) 팬데믹(pandemic)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세계에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음.
 - 제70차 UN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의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정하고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인류 공동의 17개 목표를 세움
 - IPCC¹⁾가 2018년『지구온난화 1.5℃』특별보고서를 승인하는 등 그린뉴딜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확대
 - 『지구온난화 1.5℃』는 2050년까지 순 탄소배출량 제로를 달성해야 기후변화 대응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에너지, 도시, 산업 시스템 등 전 분야에 걸친 빠르고 광범위한 전환을 요구
 - EU는 유럽 그린딜 발표(2019.12.11.)를 하는 등 2050년까지 탄소중립²⁾ 및 기후변화 억제를 위한 선도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목표달성을 위해 10년간 1조 유로 투입
 - 미국 또한 미 의회 상하원 결의안을 2019년 2월 7일에 제출하였고 10년내 탄소중립 및 무공해 에너지원으로 100% 전환을 목표로 하며, 정부는 10년간 17조 달러를 투입하기로 결정

1) IPCC(International Panel of Climate Change): 인간활동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국제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임.

2) 탄소중립이란, 온실가스 배출량과 제거량을 계산해 순배출량이 제로가 되는 상태로 이미 전 세계 70여개 국가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으며 중국과 일본도 각각 2060년, 2050년을 목표로 함.

- 우리나라는 2020년 7월 14일에 발표된 “한국판 그린뉴딜 종합계획”은 2025년까지 국비 114.1조 원을 투입하여 일자리 190만 개를 창출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주요 전략은 안전망 강화라는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의 두 축으로 추진되는 2+1 구조를 가짐.
- 기후위기와 더불어 농촌의 생태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며 과거 생산주의 농정에서 우리나라 농업 농촌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우리나라 그린뉴딜 정책과 더불어 충남도 농촌융복합산업 분야에서 추진할 수 있는 시책 발굴이 필요함.
 - 과거 화석연료 투입에 의한 고품질, 비계절적 고소득 시설 작물(생산주의, 경쟁력주의 등)에 대한 위기 및 환경 친화적 농업 및 먹거리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
 - 그렇기에 농업 생산, 가공, 유통분야에서의 환경친화적 정책 마련과 더불어 농촌융복합산업 분야에서도 소비되는 에너지 자원의 전환 방법과 오염원 저감 기술과 같은 정책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연구방법

- 본 연구는 델파이(delphi) 분석기법을 적용, 2020년 한국판 그린뉴딜 정부발표 이후 그린 뉴딜을 통한 충남 농업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3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였고, 해당 전문가 그룹에서 도출된 결과를 정리한 것임.
 - 본 연구는 국가가 발표한 한국판 그린뉴딜과 더불어 충남도에서 실시할 수 있는 농촌융복합산업 분야를 다루는 것으로 충남도 농정 전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한 연구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연구를 진행하였음.
 - 우선 우리나라의 한국판 그린뉴딜의 의의와 국내외적 시대적 변화흐름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하고
 - 둘째, 각 전문가 그룹별로 시대적, 충남의 상황에 맞는 우선적 문제를 제기하고
 - 셋째, 연속된 전문가 그룹 토론회를 각 5회에 걸쳐 실시
 -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정책 시사점을 제안하는 것으로 본 연구를 종료함.

1. 한국판 그린뉴딜(Green New Deal, 2020)의 개념

- 2020년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 연설에서 2050년까지 지역이 주체가 되는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고 밝히면서 지역이 주체가 되어 기후위기·경제위기·불평등 위기를 극복하도록 하는 국가 주도의 ‘한국판 그린뉴딜’ 계획을 발표
- ‘한국판 그린뉴딜 종합계획’은 2025년까지 국비 114.1조원을 투입, 안정망 강화라는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digital new deal)과 그린뉴딜(green new deal)의 두 축으로 추진되는 것이 핵심
 - 디지털 뉴딜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인프라 및 서비스 등 우리나라의 강점인 ICT를 기반으로 디지털 초격차를 확대하여 경제 전반에 디지털 혁신과 역동성을 촉진·확산하는 전략으로 총사업비 58.2조 원(국비 44.8조 원)을 디지털 경제 전환 가속화를 위한 DNA³⁾ 생태계, 비대면 산업 육성, SOC디지털 등에 투자
 - 그린뉴딜은 친환경·저탄소 등 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여 탄소중립(Net-Zero)을 지향하고 경제기반을 저탄소·친환경으로 전환하는 전략으로 총사업비 73.4조 원(국비 42.7조 원)을 기후변화 대응 강화, 친환경 경제 구현을 위한 녹색 인프라, 신재생 에너지, 녹색산업 육성 등에 투자

3) DNA(Data·Network·AI)가 기반이 되는 디지털 중심을 의미함.

2. 농업·농촌 분야의 그린뉴딜 정책

- 한편 농업분야에서의 뉴딜 정책은 다소 소외되는 경향이 있으나, 2020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에서 발표한 '농어업 농어촌 분야 대전환을 위한 그린뉴딜 비전·과제'의 주요 중점과제와 내용 그리고 우리나라 농정 변화의 틀과 다소 연관되어 있음.
 - 농특위에서 발표한 그린뉴딜 비전과 과제는 5대 중점과제와 13개 세부과제로 제시
- 그린뉴딜과 직접적 연관성을 갖는 중점과제는 탈탄소·생태(유기)농업·경축순환형 농업 전환 및 산림 탄소저감기능강화 그리고 농어촌 자원이용 재생에너지 확대로 온실가스 감축 및 지역에너지 자립 두 개축으로 구성
 - 탈탄소·생태(유기)농업·경축순환형 농업 전환 및 산림 탄소저감기능강화 중점과제는 1)경축순환 농업, 2)숲 탄소 흡수력 제고, 3)화학비료 50% 감축, 4)논농업 친환경농업 전환 30% 확대 등 4개 세부과제로 구성
 - 농어촌 자원이용 재생에너지 확대로 온실가스 감축 및 지역에너지 자립 중점과제는 1)농촌 재생에너지 확대, 2)바이오에너지(축분, 목재) 활용 에너지 자립 확대로 두 개 축 6개 세부과제가 직접적으로 그린뉴딜에 해당

〈표1〉 농어업 농어촌 분야 대전환을 위한 그린뉴딜 비전·과제(농특위, 2020)

중 점 과 제	탈탄소·생태(유기)농업, 경축순환형 농업으로 전환 및 산림탄소저감기능강화	① 화학비료·농약·항생제 50%감축(30년) ② 논농업 친환경농업 전환 및 비중 30%확대(30년) ③ 경축순환·동물복지형 축산 전환, 토양양분관리제 도입 등 ④ 숲탄소흡수력제고 및 목재활용(콘크리트·플라스틱 대체)
	식량자급 확대 및 지속가능 먹거리시스템 구축	⑤ 식량자급률제고(10%p ↑) 및 적정농지확보 ⑥ 국가푸드플랜 수립 및 공공급식 전면화 ⑦ GMO완전표시제 도입 등 먹거리 안전성 강화
	농어촌재생에너지 확대로 지역에너지 자립	⑧ 주민주도형 농어촌 재생에너지 확대 : 태양광 20GW(30년) ⑨ 바이오에너지(축분, 목재) 활용 에너지자립 지역·마을 확대
	농어촌 정주여건 획기적 개선 및 미래주체 육성	⑩ 농어촌공간계획 제도화 및 365생활권 구축 ⑪ 미래 농어업·농어촌 주체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농수산물 수급·가격안정 및 농어가소득안전망 구축	⑫ 공공급식 공급체계 확립(공공비축수매제 등), 디지털통합플랫폼 구축 등 수급·가격안정 종합체계 완비 ⑬ 농가수입보장보험 도입, 농어업재해 국가보상체계강화, 농어업인 안전보험의 사회보험 전환

자료 : 농어업·농어촌 분야 대전환을 위한 그린뉴딜의 비전과 과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그린뉴딜 작업반, 2020

1. 충남형 그린뉴딜 농촌융복합산업 정책 분야

1) 현황 및 필요성

- 충남도 농촌융복합산업은 경영체의 판로 확대 및 소득 증가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다만, 일각에서는 지금까지의 정책 사업들이 기존 농촌산업 정책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농산물의 식품가공 중심으로만 진행되고 있다는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음.
 - 충남의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 다수가 식품가공업인 2차 산업이 81%를 차지(2021년, 농식품부 내부자료)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인 단순 식품가공업과의 차별성이 크지 않은 상황
 - 융복합산업은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것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기존 농촌융복합산업 업무를 담당하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에서 담당하면서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가공산업 중심의 지원 사업의 명칭만 변경되어 추진되고 있는 것이 현실
- 한국판 그린뉴딜로 통칭되는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충남의 관련 정책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사업 대상과 사업 구조 등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음.
 - 정부가 농촌융복합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은 “농촌 융복합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대표적이거나, 농촌융복합산업의 수행 주체를 농업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한정하는 등 농촌융복합산업의 개념(정의)이 농림축산산업과 농촌만을 강조하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지원 대상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림축산업자에 한정되는 한계 존재

- 한국판 그린뉴딜의 디지털 전환과 같은 측면에서 생산-유통-소비 전반에 걸쳐 디지털 농업으로의 혁신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정책 대상을 기존 농업 및 농촌 지역 주체들에서 비농업-비농촌 소속 주체들로 확대 검토 필요

-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중 한국판 그린뉴딜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들을 선정하여 확대 필요

- 기존 사업에 ICT 4차 산업 기술을 접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 충남도의 농촌융복합산업이 1차·2차·3차 산업을 아우르는 문자 그대로 “융복합 6차 산업”임을 감안할 때, 한국판 그린뉴딜과의 점점 발굴 필요

2) 충남형 그린뉴딜 농업 정책 분야 정책 제안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사업 확대 시행

- 한국판 그린뉴딜 종합계획은 당분간 우리나라 국정 전반의 핵심 의제(agenda)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가공산업, 농업생산기술 분야에서 탄소저감 기술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 저탄소 농업기술은 비료 및 작물보호제 절감기술, 농기계 에너지 절감기술, 난방에너지 절감기술, 농업용수 관리 기술이 해당
- 농업실용화재단에서 심사 및 인증을 부여하고 있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은 소비자에게 좋은 인상을 주게 되어 관련 소비가 확대되고, 2019년 인증 초기 소비시장 매출 총액이 511억 달할 정도로 크게 성장 중
- 저탄소 인증품목은 식량작물(6), 채소(24), 과수(12), 특용작물(9)의 총 51개 품목

- 선제적 충남도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녹색인증 지원 정책

-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또는 사업에 대한 녹색인증(green certification) 취득을 촉진하는 사업을 도입하고 이를 적극 홍보하여, 충남도 농정이 그린뉴딜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알려 소비자의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추진

〈그림1〉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과 녹색인증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고부가가치 푸드테크 R&BD(Research & Business Development)지원 및 푸드테크지원 센터(팀) 운영
 - 지역별 전략 상품을 선정한 다음, 적절한 푸드테크 또는 푸드 스타트업 아이디어를 접목하기 위한 플랫폼(platform)을 마련하는 사업을 검토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단기적으로 코로나 19로 인해 급성장하고 있는 밀키트(meat kit) 상품, 맞춤형 간편식 상품 등의 개발이 가능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곤충식품·대체식품 등의 높은 단계 상품 개발 및 검토
 - 틀에 박힌 모습을 가진 식품가공산업에 새로운 자극을 주기 위해서 외부의 푸드 스타트업 업체들을 유치하여 관내 생산 농가 및 업체들과 협업해나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서울시의 “서울먹거리창업센터”의 사례 참고
 - 플랫폼은 관내 중간지원 조직을 확대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데, 외부 기관이나 업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기술 및 아이디어 적용 극대화에 주력
 - 다만, 가공식품의 고부가가치화와 함께 기존 가공식품 생산 공정의 효율화 및 표준화는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중요
 - 실버푸드 산업에 대한 연구조사 필요하며, 대기업, 중기업이 접근 불가능한 틈새시장을 찾는 것이 시급
 - 실버푸드 산업에 대한 연구조사 필요
 - 3년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5억 미만 영세 기업 육성 방안 모색
 -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접근 불가능한 틈새시장을 찾아 단계적 지원
 - 기능성 식품과, 발효식품, 실버식품 등 그린뉴딜과 연계한 2단계 푸드테크 R&BD 사업으로 전환 모색

- 사업의 다변화 및 기능성 식품 제조 산업 육성(기후변화 대응 식품)
 - 농촌융복합산업 상품들을 통한 미세먼지 섬유소 흡착 후 배출 될 수 있는 식품 제조
 -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공기를 정화하는 (반려)식물을 재배하고 가정에서 쉽게 기를 수 있는 화분을 판매/렌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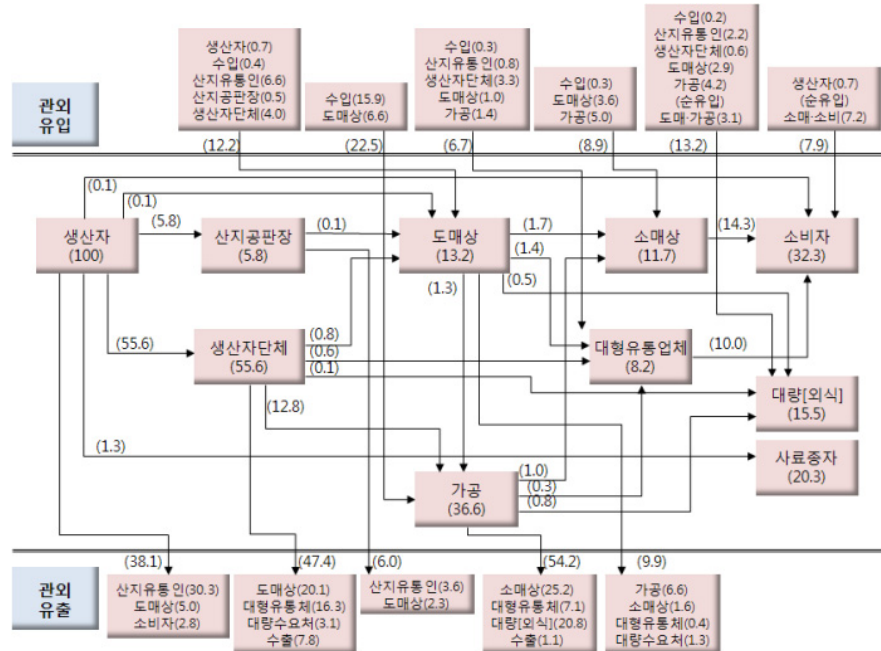
2. 충남형 그린뉴딜 농촌융복합산업 오프라인 도·소매 유통분야

1) 현황 및 필요성

- 농업 및 농산업 분야에서 그린뉴딜의 핵심은 유통의 혁신 및 지역 농산물 선순환 체계임.
 - 과거 충남도는 민선3기부터 3농혁신의 일환으로 지역순환 농식품체계 구축을 위한 활동이 지속되었으며 그 결과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 및 거점학교급식지원센터가 각 시군별로 설립되었으며, 2019년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되었음. 이로 인해, 지역의 우수 농산물이 학교급식을 통해 소비되고 있음.
 - 민선 5기까지, 충남도는 3농혁신에 의한 지역순환먹거리체계 구축과 더불어 최근 푸드플랜(food plan)사업까지 확장되면서 로컬푸드 직판장 71개소, 6차산업 상품의 농산물 직거래 행사가 충남 곳곳에서 다수 이뤄지고 있으나, 거점 및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 필요성 대두
 - 2019년 충남 푸드플랜 수립연구 결과, 충남도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필요성 및 지역순환 가공식품센터 설치 제안 결과로 볼 때, 광역권 유통센터의 필요성 제기
- 충청남도 신선 농산물의 유통경로는 매우 복잡한 유통체계에 의해 움직이고 있음.
 - 농산물 매입가 기준 충남도 전체 농산물의 관외 유출 비율은 155.6%이고, 유입비율은 90.5%이며, 순유출 비율은 65.1%로 분석
 - 충남의 농산물 전체 소비량은 생산량 대비 35.9%이고, 외부유입을 줄이기 위한, 도매시장(산지공판장)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유통체계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의 증가가 가장 합리적인 유통방식이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농협생산자 단체를 제외한 지역 및 광역 산지공판장 도매시장 육성의 필요성 제기

〈그림2〉 충남 농축산물 유통경로(금액기준)

단위: %



자료 : 충남 지역순환농식품 체계 기본계획, 2012, 허남혁, 정현희

- 주 1. 생산액에서 생산감모액(8.0%)을 차감한 유통액을 기준으로 전체 비율을 산정
 2. 유통비용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주체별 취급액과 판매액 합산치가 서로 다름
 - 판매액 합산치 = $\sum(\text{유통경로별 취급액} * \text{해당 유통단계별 유통비용률})$
 3. 수산물 제외

2) 충남형 오프라인 유통합(원물, 가공식품, 수공업) 도소매 커뮤니티 마켓 개설

- 충남은 현재 부여군에 충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을 추진 중에 있음. 부여는 지역적으로 충남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먹거리센터의 광역 공공 유통 중심지로서의 역할과 더불어 도매 시장과, 주말 소매시장의 역할이 동반되어야 함.
 - 특히, 현재 농업 경영체는 농산물을 직거래로 판매하는데 있어서 로컬푸드 직판장과 주말 장터(비상설)를 떠돌며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며, 6차산업 가공식품 및 수공업 상품 또한 마찬가지로 오프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
 - 충남은 행정수도권 입지로서, 충남의 광역 농산물 유통체계를 완성함과 더불어, ‘시장(市場)’을 매개로 소비자에게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장과, 생산자와, 수공업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함으로써 충남도 저탄소 그린뉴딜의 핵심 축으로 육성

- 일요일 오전에만 열리는 치앙마이 ‘러스틱(Rustic market) 마켓’의 성공사례

- 2018년 7월 1일에 개장한 역사가 그리 길지 않은 ‘러스틱 마켓’은 홈메이드 가공식품과 수공예 상품을 주로 판매하는 시장으로 시작되었으며, 파머스 마켓(farmers market), 유기 농산물 판매로 확대되면서, 현재는 수공예, 가공식품, 농산물, 축산물, 레스토랑, 중고 상품까지 확대 되어 연간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
- 길지 않은 역사를 가진 러스틱 마켓의 성공의 핵심은, 지역 사회문화와 결합된, 다채로운 소비 시장에 있다고 판단되며, 소비자나 관광객은 단순 농산물이 아닌 여러 생산자가 만든 상품을 보고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그림3〉 태국 치앙마이 러스틱(Rustic market) 마켓 전경



3. 충남형 그린뉴딜 농촌융복합산업 온라인 판로 분야

1) 현황 및 필요성

- 충남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6차산업 인증) 208개소('21년, 8월 기준) 중 매출액 기준 1억원 이하 영세 경영체가 60% 이상이며, 해당 경영체가 온라인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상품은 전체의 30% 이하로 추산
 - 6차산업 인증경영체 및 농업 경영체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생산자와 소비자간 가격 판단 기준에 있어서, 경영체는 가격, 품질, 경쟁력, 맛 등에 있어서 고(高)평가 하는 반면, 전문가 및 시장에서는 저(低)평가하는 경향
 - 식품산업에서 대기업과 경쟁해야하는 6차산업 상품의 경우 저자본, 소량생산, 노동집약적 산업 등 원가 구조가 높은 현실에 의한 경쟁력 약화
- 계절적 소비 경향이 높은 상품이 다수 포진되어 있거나, 생산이 용이한 상품이 주류(장류, 기름, 단순가공, 착즙, 쌀 제품, 김치 등)를 이루다 보니, 상품의 다양성이 결여되는 문제가 발생
 - 지방정부 및 도의회 정책입안자의 경우 농업 경영체 상품의 고른 판매 및 판촉활동 전개를 통한 보편적 정책을 요구하는 반면, 유통업자, 유통업체의 경우 경쟁력 있는 상품을 선택적 판매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어 이해관계 발생, 결과적으로 경쟁력 약화 시키는 문제 발생
- 현재 도 및 시군 농식품 온라인 유통 경로 다수 존재하여 중복문제(굿뜨래, 고맛나루, 농사랑, 부여/천안/대전 안테나숍 등)가 야기되고 소비시장이 분산되는 경향이 있음. 상호 시너지 효과를 발현할 수 있는 정책 대안 마련 혹은 통합 집적화 하는 방안 마련 필요

2) 온라인 판로 중심으로 전환

- 농업 경영체 상품 리스트 D/B 구축 및 온라인 품평회 개최
 - 유통업자(MD) 입장에서 상품을 선정하고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온라인 판매가 코로나 이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충남 상품을 선택하여 판매하는 것이 제한적임.
 - 특히 모바일 판매량이 급속도로 증가(온라인 판매 중 모바일 40%차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6차산업 상품은 환경변화에 능동적이지 못함.

- D/B를 구축하고 분류하며, 분류된 상품의 품질과, 기능, 성분 등에 대한 컨설팅을 통한 온라인 판로 확대 방안 모색 필요

• 대기업 제품과 차별화된 온라인 마케팅 전략 지원

- 과거의 온라인 판매는, 쇼핑몰을 구축하고 소비자를 유입시키는 것이었지만, 현재는 쇼핑몰을 구축하지 않아도 되는, 플랫폼(네이버 스마트 스토 등), SNS, 유튜브 인플루언서, 라이브 커머스(실시간 영상 전송) 등 다양
- 농업인 정서와 상품별 특징에 맞는 온라인 판매 타겟 설정 필요
- 현재 충남에서 20개 경영체의 상품을 유튜브⁴⁾를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 7억 3천만원 매출 달성
- 유튜브 판매 방식은, 유튜브 채널 중 농산물 구매력이 강한 40 ~ 60대를 타겟 시청자를 대상으로 유튜브에서 쇼핑몰로 유도하는 방식
- 농가 정서에 맞는 상품으로 디자인하고 온라인 판로 차별화

• 온라인 분야 전문 유통지원 및 컨트롤지원센터(팀) 운영

- 6차산업 상품의 현황 데이터가 없음(D/B 필요)
- 경영체 대다수가 온라인 판매 사이트(스마트스토어)를 소유하고 있으나, 운영능력에서는 한계가 있음.
- ⇒ 농가는 온라인 판로에 대한 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이를 도울 수 있는 전문 컨트롤 타워가 필요

• 온라인 판로 확대 전환을 위한 핵심 체계

- 충남 융복합 상품 D/B 구축 방안(품목, 형태, 인증, 사진, 가격, 특징 등)
- D/B 구축에 따른 유형 분류(1=상품구색, 2=디자인변경, 3=타겟 및 온라인 판로 방식, 4=직접 판매 방안) 및 타겟 시장과 온라인 판매 방식 설정 방법
- 충남 융복합 상품 판매 허브 구축 : 충청남도 하나의 벤더(허브)가 되고, 온라인 플랫폼에 융복합 상품 판매 지원-> 허브에서 전송한 판매리스트를 확인 후 농가 직접 배송 -> 허브에서 정산하는 방식

4) 충남연구원 농업6차산업지원센터 유튜브 지원사업

04 요약 및 제언

1. 요약

- 2020년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 연설에서 2050년까지 지역이 주체가 되는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고 밝히면서 지역이 주체가 되어 기후위기·경제위기·불평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 주도의 ‘한국판 그린뉴딜’ 계획을 발표
- ‘한국판 그린뉴딜 종합계획’은 2025년까지 국비 114.1조원을 투입, 안정망 강화라는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digital new deal)과 그린뉴딜(green new deal)의 두 축으로 추진되는 것이 핵심
- 그린뉴딜과 직접적 연관성을 갖는 중점과제는 탈탄소·생태(유기)농업·경축순환형 농업 전환 및 산림 탄소저감기능강화 그리고 농어촌 자원이용 재생에너지 확대로 온실가스 감축 및 지역에너지 자립 두 개축으로 구성
- 충남이 나아가야할 방향에서 충남 농촌융복합산업 분야 그린뉴딜을 위한 추진정책으로 3대 분야 10개 과제를 제안

1) 충남형 그린뉴딜 농촌융복합산업 정책분야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사업 확대 시행
- 선제적 충남도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녹색인증 지원 정책

- 고부가가치 푸드테크 R&BD 사업 지원 및 푸드테크지원센터(팀) 운영
- 사업의 다변화 및 기능성 식품 제조 산업 육성(기후변화 대응 제품)

2) 충남형 그린뉴딜 농촌융복합산업 오프라인 도·소매 유통분야

- 로컬시장/푸드마일 감소/지역거점 소비시장 확대를 위한 충남형 오프라인 융복합 도·소매 커뮤니티 마켓 개설

3) 충남형 그린뉴딜 농촌융복합산업 온라인 판로 분야

- 농업 경영체 상품 리스트 D/B 구축 및 온라인 품평회 개최
- 대기업 제품과 차별화된 온라인 마케팅 전략 지원
- 온라인 분야 전문 유통지원 및 컨트롤지원센터(팀) 운영
- 온라인 판로 확대 전환을 위한 핵심 체계 구축

2. 정책제언

- 본 연구에서는 2020년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과 더불어 충남 농촌융복합산업 분야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을 3대 분야, 10개 과제로 제안하였음.
- 첫째, 충남형 그린뉴딜 농촌융복합산업 정책분야에서는 농업과 식품가공분야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저탄소 기술 및 녹색인증관련 사업의 확대 시행이며, 융복합산업에서 앞으로 고부가가치화 혹은 선도 가능한 실버푸드 및 기후변화 대응식품 등을 육성하고 지원 가능한 푸드테크 R&BD 센터를 운영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임.
- 둘째, 충남형 그린뉴딜 농촌융복합산업 오프라인 도·소매 유통분야에서는 기존에 연구한 충남의 농산물 유통체계의 연구결과에 따라 지역의 농산물이 외부로 유출되었다가 재 유입되는 문제가 발견됨, 농산물 유통거리 축소와 지역소비 증가는 푸드마일(food miles)과 관계가 있으며 농가소득과도 연결되어 있으므로 충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역할 확대가 필요함

- 현재 충남 푸드플랜 사업에서 추진 중인 부여군 일대 ‘충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역할을 먹거리센터(학교급식) 중심에서 농업을 중심으로 지역 사회문화와 결합된 다채로운 관광상품 및 소비시장 육성이 필요성을 제안하며 그 대안으로 농산물 산지 도매시장, 농업인이 주도하는 가공식품, 수공예 제품, 레스토랑이 결합된 도·소매 커뮤니티 복합 시장이 대안이 될 수 있음. 이러한 시장의 형태는 단순 농업인과 산지거래인간의 교류활동으로 국한되는 시장을 관광객까지 확대하는 것이며 시장으로 지역사회를 활성화하는 대표 모델이 될 수 있음.
- 셋째, 충남형 그린뉴딜 농촌융복합산업 온라인 판로 분야로 융복합산업 상품의 온라인 판로 중심으로 시장을 변화시켜야 될 것임.
 - 온라인 판매로의 전환은 소규모 농가의 융복합산업 상품은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차별화된 방법이며, 직거래를 통한 농가소득증가 및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노력일 것임.
 - 온라인 판로의 확대를 위해, 농업 경영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품의 D/B를 구축하고 도매인이 쉽게 접근하여 평가하고 수급 가능해야 하며, 경영체의 상품과, 온라인 판매방식을 모니터링하고, 해당 결과를 분석 타켓 시장을 설정하며, 판매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 상황임.

※ 본 리포트는 충남연구원 2020년 농업6차산업센터 ‘농촌산업화 기획평가체계 구축 3대 분야 전문가 소그룹 활동 자원’ 결과를 재구성한 것임.

(연구책임) 정현희 충남연구원 농업6차산업센터 책임연구원 h2jung@cni.re.kr

(그린뉴딜, 농촌융복합산업 정책분야) 김성훈 충남대학교 교수, 홍승지 교수, 구승모 교수 김영희 박사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사업분야) 강경심 공주대학교 교수, 윤준상 교수, 안영직 배재대 교수, 김지현 목원대
교수 이용환 한식연 박사

(온라인 판로 확대 분야) 문영주 박사, 오광수 대표 (ISBNET), 최익한 대표 (LIM)

참고자료

- 김성훈 외. 2018. 「푸드테크 및 푸드 스타트업 육성 방안 연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2020, 농어업·농어촌 분야 대전환을 위한 그린뉴딜의 비전과 과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그린뉴딜 작업반
- 허남혁, 정현희, 2012, 충남 지역순환농식품체계 구축 기본계획 수립연구, 충남연구원
-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
- 충남농업6차산업화센터(www.충남6차산업.com)
- 치앙마이시티라이프<https://www.chiangmaicitylife.com/>